

#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①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② 기업경쟁력 제고
- ③ 자본시장 활성화

## 2. 민생경제 회복

- ① 결혼·출산·양육 지원
- ②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3. 조세체계 합리화

- 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② 과세형평성 및 세원투명성 제고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① 납세자 편의 제고
- ② 납세자 권리 보호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01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합니다.

#### 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국가 전략기술	7개 분야* 66개 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b>71개</b> 기술* *① 기술추가: 반도체(17개), 아차전자(17개), 디스플레이(27개), 수소(17개) ② 현행기술 범위 확대: 반도체(47개), 바이오(17개)
신성장·원천기술	14개 분야* 270개 기술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 부품 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14개 분야 <b>273개</b> 기술* *① 기술추가: 수소(27개), 에너지효율·수송(17개) ② 현행기술 범위 확대: 첨단소부장(2개), 탄소중립(17개)

#### ②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비용	현행	개정안
소프트웨어 대역·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등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불인정 (일반 R&D 적용)	<b>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amp;D 인정</b>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R&D 세액공제 미적용	<b>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일반 R&amp;D 세액공제 적용</b>

#### \*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	25	30~40	40~50
중견	8	20~30	30~40
대	최대 2		

#### ③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현행	개정안
적용 대상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외국인 기술 제공자 또는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5년 이상 연구 경력의 외국인 연구원(연구기관, 학교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b>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b> 추가
감면 내용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동일

#### ④ 증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증부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 등	<b>지방저가주택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상향</b>

### 02 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① 기업상속공제 대상업종 확대

	현행	개정안
기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등	「소상공인법」에 따른 <b>백년가게</b> 추가

### 03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① 개인투자자용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대상	개인투자자용 국채 10년물 이상	<b>5년물 이상</b>
한도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	☞ 동일
특례내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14%) 적용	☞ 동일

#### ②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25.7.1.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

\* TRET(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환매·양도 시까지 분배하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수의 분배를 의무화하되,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유보 선택 허용

	현행	개정안
적격집합투자 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 가능 사유	①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 동일
	② 투자자산 매매·평가이익	☞ 동일
	③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	<b>ETF거래 이익 중 이자·배당은 제외</b>
	④ (신설)	<b>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 유보 가능</b>

## 2. 민생경제 회복

### 01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합니다.

#### ①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요내용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b>전액 비과세</b>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내 지급받은 경우

	개정안
비과세 적용 제외대상	①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② (법인) 법인의 지배주주 등
비과세 적용 지급횟수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

### 02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합니다.

#### ①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세부사항 규정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15%	☞ 동일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 동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30%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동일

	개정안
대상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b>수영장 및 체력단련장</b>
공제범위	<b>시설이용료만 인정</b> (운동강습비·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 ②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현행	개정안
세율	5%	<b>3.5% (100만원 한도)</b> * '25.1.3.~6.30. 적용

3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현행	개정안
지원대상 농업	곡물 등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 제외)	콩나물재배업 추가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농업용 필름 · 파이프 등 66종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추가

4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현행	개정안
경감대상 제조자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경감한도 및 경감율	① (발효주) 200㎏ 이하: 50% ② (증류주) 100㎏ 이하: 50%	① (발효주) 200㎏ 이하: ◀ 동일 200~400㎏ : 30% ② (증류주) 100㎏ 이하: ◀ 동일 100~200㎏ : 30%

3. 조세체계 합리화

01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합니다.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현행	개정안
거주자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2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명확화 주요내용	
	개정안
종업원 할인혜택의 소득 구분	기업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을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이익 = 근로소득

	개정안
시가의 판단기준	시가: 동일 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 (다만,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 · 용역별 시가 합산한 금액의 20%
재판매 금지기간	(자동차 · 대형가전 · 명품등) 2년, (그 외 재화) 1년

3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26.1.1. 이후 시행)

	개정안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

4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현행	개정안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적용시1주택 판정시점	주택 양도시	① (원칙) 주택 양도시 ② (예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은 주택 매매계약 시점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내용	적용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25.5.9.까지 적용 배제	1년 연장(~’26.5.9)

02 과세형평성 및 세원투명성을 제고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26.1.1. 시행)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필요

	현행	개정안
대상 업종	변호사, 병의원 등 138개 업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 추가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01 납세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1 대한대출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현행	개정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적용	전세자금 대한대출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적용

2 비거주자 · 외국인법인 국채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현행	개정안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	① (공모펀드) 펀드별 제출 ② (사모펀드) 하위투자자별 제출	(공모 · 사모펀드) 펀드별 제출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전제출	사후확인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

02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1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현행	개정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미신고 과소신고	미신고 · 과소신고금액의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10%(단일율), 10억원 한도
	미소명 거짓소명	미소명 · 거짓소명 금액의 20%	10%
금융정보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미제공 거짓제공	금융기관별 2천만원	◀ 동일 * 고의 · 중과실에 한정
	일부 미제공	금융기관별 1천만원	계좌당 10~30만원 * 한도 1천만원~2천만원

2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 특별재난지역내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 · 매각 유예 특례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 추가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

